

## -미중경쟁 시대, 지정학적 위기와 한국의 경영 -Politics & Business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 I. 서론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 이후 세계화 시대를 거쳐 다시 분쟁과 갈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 변화의 흐름은 미중 경쟁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억제되었던 국제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전 세계가 염려했던 화약고들이 터지고 있다. 2022년 유라시아대륙 서쪽에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라시아대륙 동쪽에서는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가 화약고로 지목되어 왔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방 대만 해협이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중국해 관련국과 한반도 및 동맹국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발점은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가 다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견제한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늘 긴 갈등 축적기를 거친다.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대륙 동쪽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대만 해협이다. 양안 관계는 대만의 집권당 성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으나 지난 30년간 직접적인 충돌 없이 위기를 넘겨온 것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정치, 경제, 기술, 군사안보, 에너지, 식량, 자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바라기는 중국의 발전이 더뎠고 미국의 견제가 느슨해지면서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만통일'을 추구하며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해군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방해해도 중국의 발전 경로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도 직접 충돌 없이 중국을 주저앉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중국의 도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한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이 된 이후 다른 대륙에서 미국에 도전할만한 지역 패권국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워싱턴 미중관계 회의에서 세계대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은 미중 모두 준비하고 있다. 성능은 미국에 뒤지더라도 중국의 군함 수는 이미 미국의 군함 수를 넘어섰다. 미국의 군사연구소들은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결성한 오커스(AUKUS)에 일본과 한국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필리핀과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도 2023년 12년 만에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중국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며 나토군의 전략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현재까지 대량의 첨단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고 대만군은 이를 바탕으로 자위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자연스러운 대만통일이 어렵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이다. 작년부터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생산까지 약 5년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TSMC에 의존하는 미국으로서 반도체 독립은 미중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저지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이후에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고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등 중동 정책이 크게 변했다. 2027~2028년경 미국이 반도체 독립을 이루게 되면 대만을 전쟁 없이 지켜야 될 의미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한반도가 매우 위험한 전략 환경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경우, 북중러 대 한미일이 대치하며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은 주한·주일 미군이 대만에 집중하면 한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회로 여길 수 있다.

국제질서는 화합과 협력의 시기를 지나 분쟁과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미중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만 해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종횡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다자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되 남북, 한중, 한러 등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미·일과의 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듯 북·중·러와의 관계개선 역시 안보를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의 균형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국이 안보를 위해 좌표를 지나치게 편향되게 움직이면 대척점에 있는 상대국은 한반도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안보 위협이 발생한다. 분쟁과 갈등의 시기에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이웃 국가가 되고 자국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국가가 될 때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 II. 미중경쟁 시대

### 1.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과 국제질서의 변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Offensive Realism)을 바탕으로 '강대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힘의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참전한 이유는 유럽의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위험한 적국이 지역적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평화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얻어진 기분 좋은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sup>1)</sup>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으로서 다른 대륙에서 지역 패권국이 출현하여 그 대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은 대륙의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서양동맹을 통해 서유럽을 미국 편으로 견인하고, 러시아의 제국 건설을 막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NATO) 가입을 지원했다.<sup>2)</sup> 또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도왔지만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본격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하였고,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은 미중패권경쟁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공세적 외교에 바이트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및 민주주의 동맹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유라시아전략은 대륙의 서쪽 끝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동쪽 끝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대결 구도를 형성했고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동진은 러시아에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었고, 중국의 급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총공세는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핵심국가는 미국이며, 양국은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배격하고자 협력해 왔다. 지금의 긴밀한 중러관계는 유라시아 대륙에 지배적 패권국의 등장을 막으려는 미국의 對중국·對러시아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2001) pp. 362-365.

2)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Partnership for peace, PfP)는 나토와 소련 및 그 위성국 사이에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현재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14개국이 나토 정회원국이 되었다.

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범위 내에서 상호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견제와 갈등 관계이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제정치·경제·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례없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역외 공격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지정학 전략을 추동하고 있으며, 중·러의 연대가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경쟁에 미친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여는 이정표로 각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의 시기를 앞당기고 신냉전을 촉진하였다. 안보와 경제 발전의 양립을 모색하던 유럽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복원하고, 반대로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결집하여 양 진영을 중심으로 냉전적 안보 구도가 형성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서방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와 중국·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연대의 결집을 촉진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진영 경쟁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에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 편에 서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 내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 Ⅲ. 미중패권경쟁의 확장, 지정학적 위기

### 1)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회복 및 동맹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주창했다. 이는 미국 국력의 한계를 인지하며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미이다. 2021년 2월 19일 제57차 뮌헨안보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맹의 현실주의적 도전으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정했다.<sup>3)</sup>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복원은 환영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상정하고 공동대응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었다. 2021년 2월 19일 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중·러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찾을 것을 요구하며 “대서양 양쪽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sup>4)</sup>고 말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의 안보 구조 재건은 ‘러시아와의 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동맹 및 대서양동맹을 강화하는 중심점이 되었다.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럽의 경제·에너지·군사안보를 강화하기

3)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4) Melissa Eddy, “Merkel calls for common strategy in dealing with China and Russia,”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위한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급진전하였다.<sup>5)</sup>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수급에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sup>6)</sup>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다방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과 공동전선을 펴게 됐고,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에 편입되었다.

미국은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군사동맹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재난 대비, 기후위기 대응, 해양 안보 등을 내세운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p>7)</sup>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오커스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호주와 브렉시트(Brexit) 후 아태지역 안보에 역할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성되었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sup>8)</sup>는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다룰 다자 경제 협의체로 중국을 역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sup>9)</sup>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특별히 기술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해온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대만과 한국에 의존해왔다. 미국은 2022년 미국 반도체 회사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 Act)’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미국이 미국(설계), 한국(생산), 대만(생산), 일본(소재·부품·장비)이 참여하는 ‘칩4동맹’을 제안한 것도 자국이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확보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은 2022년 6월 24일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지역에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 퍼시픽 파트너(PBP)’를 결성했다. PBP는 2022년 4월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군 병력 및 군함, 무장경찰을 골자로 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600만 달러(약 875억 원)의 차관을 통해 화웨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29일 국무부 청사에서 최초로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U.S. Pacific Island Country Summit)’를 개최해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과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

5) Karen Deyoung, Michael Birnbaum, “U.S., allies plan for long-term isolation of Rus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4/16/us-nato-isolate-russia/>

6) 2022년 9월 27일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발틱 파이프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인 IGB(Interconnector Greece-Bulgaria)가 2022년 10월 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억 4천만 유로(약 3천 390억 원)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리스로 연결된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TAP)에 IGB를 연결하여 연간 최대 30억 m<sup>3</sup>의 가스를 동남부 유럽으로 공급한다. 독일은 5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으며 첫 LNG 터미널이 신축되면 올겨울부터 러시아 수입 천연가스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의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면 노르트스트림1 수송량의 절반인 연간 250억m<sup>3</sup>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7)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8)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다자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적 성격을 가지며 IPEF 참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9) 최윤정,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정세와 정책』 2022 3월 제15호.

표했다.<sup>10)</sup> 중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면서 미중 경쟁이 연평균 성장률 1% 미만, 인구 25만 명 내외인 남태평양 도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GIP) 구상’을 발표했다. GIP는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덩어리에 빠지게 하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2) 미중의 경쟁에서 진영 경쟁으로 : 중국의 선택지 축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전략으로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 (strategic clarity)’<sup>11)</sup>을 강화해 왔다. 냉전 종식 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리면서 고속 성장했고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유럽이 중·러를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중패권경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 대결로 확장되었다.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국가의 결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2022년 9월 독일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로 인권 침해 등 중국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수는 없다면서 새 무역 상대를 찾고 중국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sup>12)</sup>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 토니 댄커는 대중국 강경론을 내세우는 영국 정치권에 발맞춰 재계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지만 저렴한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sup>13)</sup> EU는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하여 배터리의 유럽 생산을 지원했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배터리 여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유럽 반도체법 (Chip Act)’<sup>14)</sup>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4일 리튬과 희토류 등 원자재의 탈중국화를 골자로 하

10)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은 미-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십 강화, 태평양과 세계 연결성 강화, 기후 변화 및 21세기 도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태평양 섬 주민 번영 등을 핵심으로 하며 태평양 도서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8억 1000만 달러(약 1조 161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역 인재 개발을 위한 대학 간 펠로십 프로그램 수립, 태평양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1억 3000만 달러(약 1864억 2000만 원) 규모 투자 및 4억 달러(약 5736억 원) 규모 민간 투자도 포함됐다. (Jack Stone Truitt, “U.S. warns of China threat in first Pacific islands strategy,”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U.S.-warns-of-China-threat-in-first-Pacific-islands-strategy> (검색일: 2022.10.1.)

11)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12)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new-china-policy-will-not-be-naive-economy-minister-2022-09-13/> (검색일: 2022.9.15.)

13)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7081b385c0c6> (검색일: 2022.8.5.)

14) EU는 총 450억 유로(약 63조 원)의 공공·민간 투자·지원과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9%인

는 '유럽 주요 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 제정을 선언했다. 원자재 확보의 새로운 파트너로는 호주·인도·칠레·멕시코·뉴질랜드를 언급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원자재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과 조율되지 않은 솔츠 총리의 방중(2022.11.4.)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솔츠 총리의 방중 시기는 부적절하고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며 동시에 EU 통합을 위태롭게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종속이 유럽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또 다시 유럽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약한 고리가 독일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3기 출범 이후 G7 국가 지도자 중 처음으로 방중한 솔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이고, 독일은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탈동조화를 반대한다”면서 독일은 중국과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양국 기업이 서로 투자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5)</sup> 솔츠 총리는 11월 4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실린 기고문에서 “독일과 EU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기보다 자체 회복력을 강화하고 실용주의 기반으로 현명하게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EU가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묘사한 것은 적절하며 최근 수년간 증가해 온 경쟁적 요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 공동이해가 걸린 문제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부분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6)</sup>

중국과 유럽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미중패권경쟁에서 유럽이 중립적 위치에 있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과 외교적 입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중국은 유럽으로 일대일로를 확대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sup>17)</sup>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이 가까워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솔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핵심 이익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진영 대결 등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유럽이 경제보다 안보를 선택해 제1 교역국 중국과 급격한 탈동조화를 강행할지, 협력의 비중과 방향성을 조정해가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

---

유럽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 중국은 솔츠 총리의 방중 기간에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에 대한 구매 계약(약 24조 550억 원 상당)을 체결했고, 독일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BMW는 11월 11일 BMW 배터리 생산 공장인 라오닝성 선양시 리디아 공장에 100억 위안(1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고은, “솔츠 다녀간 뒤...BMW, 中전기차 배터리공장에 1조 9천억 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048600074?input=1195m>) (검색일:2022.11.15.)

16) 이율, “독일 총리 ‘분단 경험 독일, 중국 중심 블록형성 원치 않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05900082?site=mapping\\_related](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05900082?site=mapping_related) (검색일: 2022. 11. 4.)

17) 2020년 EU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5,860억 유로(약 780조 6,000억 원)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EU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Silvia Amaro, “China overtakes U.S. as Europe’s main trading partner for the first time,” <https://www.cnbc.com> (검색일: 2022.7.2.))

한 사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경제협력 비중을 조절하여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및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프라 투자 등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sup>18)</sup> 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유럽의 중국 견제로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 향하는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의 확장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7년의 노력 끝에 중국과 EU가 합의한 ‘중-EU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범위와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sup>19)</sup>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선택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3)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패권적 지위를 가지려는 중국의 대결

동북아시아는 미·중·러·일의 강한 세력 확장 의욕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과 갈등이 혼재해 왔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부분만 개방하여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2001년 WTO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게 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강대국’, 신형대국관계, 강대국으로서의 주변국 외교에 대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중국은 ‘신형대국외교(新型大國外交)’를 통해 ‘강대국 외교’라는 외교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한편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핵심이익’에 대한 강조, 해군력 강화를 통한 해양 강국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확대적용 등 이른바 중국식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신형대국관계는 미국 내에 팽배한 중국위협론을 희석하고 두 강대국이 상호존중하고 협력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중국이 설정한 ‘새로운 중미관계’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중미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승리하여, 양 국민과 세계 인민에게 행복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의 실질적인 의미는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하길 원하며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과 티베트 문제,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동시에 중국이 아시아의 대국이니 서로 충돌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간섭하지 말라는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중국과 나눌 의사가 전혀 없고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미중관계와 중국이 제안하는 ‘새로운 중미관계’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다.

18) 최근 ‘차이나시티’를 표방하던 독일 항구 도시 뒤스부르크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단했다. 뒤스부르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한 벨라루스 민스크 물류단지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함부르크 항망 지분 참여는 미국과 담당부처의 반대에도 솔츠 총리의 주장대로 허용했지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에서 24.9%로 축소됐다. (윤고은, “독일의 ‘차이나 시티’ 뒤스부르크, 화웨이와 사업 중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77900074> (검색일: 2022.11.10.))

19) 2021년 3월 23일 EU, 영국, 캐나다, 미국이 중국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제재에 중국이 맞제재를 하면서 CAI에 대한 EU 의회 비준을 보류했다. 2022년 4월 EU는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중국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CAI 비준은 무기한 보류됐다. 2022년 7월 19일 중·EU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CIA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원론적 사항만 확인했다.

20) 이희욱.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 제67집 (2014) p.263.

냉전체제 종식 후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하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주로 경제적 차원에 국한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전형적인 서구국가가 되거나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에 순응할 것으로 보았다.<sup>21)</sup>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화해로 인해 1990년대 초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도 급격한 정치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22)</sup> 그러나 지금 중국은 아시아에 서뿐 아니라 세계질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도 패권국이 되려 한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스스로 대국(大國)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sup>23)</sup>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적응(adaptation)과 위축(atrophy)을 반복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sup>24)</sup>해왔고, 국가가 시장규칙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의 이익을 국가이익에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길을 열었다.<sup>25)</sup> 중국의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서구의 시장경제 모델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쌍순환 전략'과 같이 당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에는 당권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치열해질 미중 경쟁에 대응하여 당의 개입을 강화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일대일로, 기술굴기, 강군전략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맹렬하게 전진하는 중국의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재편한 세계질서 속에서 1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려는 중국의 총력전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예의 주시했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중동분쟁 개입,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더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수송을 위해 중동평화와 해상 안전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었고,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이 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회생과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은 미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미중 전략 경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념적 차이로 규정하고, 그동안 경제, 기술, 군사, 안보, 인권 등으로 구분했던 분야별 경쟁을 민주주의 진영의 안보문제로 귀결짓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적 측면에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실 은폐, 역학조사 거부, 책임회피 등을 언론 통제와 감시, 인권 탄압 등을 공산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이용하여 자본의 이익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중국을 세계화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sup>26)</sup>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인식

21)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New York, Penguin Books, 2012, p.25.

22) Maria Hsia Chang, "China's Future : Regionalism, Federation, or Disintegrat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5, No.3 (September 1992).

23)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390.

24) David Shambaugh,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p.161-181.

25) Giovanni Arrighi,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Verso, 2007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의 활성화, 미중 첨단기술 디커플링과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이념적 대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동맹 강화의 구심점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호전적 군사전략에 쿼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단합, 불공정 경제행위 및 기술 탈취, 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가 기밀 유출 등 첨단기술 안보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대응, 홍콩선거제 개편,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및 인권유린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압력 행사로 나타났다. 대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 재건 및 육성을 대중국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중산층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남성욱, 2020: 42-49).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 중시 정책의 강조점은, 첫째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터, 청정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둘째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제적 힘을 통합해 남용하는 중국의 비자유주의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고 불공정을 제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 4) 신냉전: 미중 디커플링과 신냉전의 도래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한중관계의 발전을 용인했던 우호적 전략 환경은 차츰 비우호적으로 변화되었고 차이메리카 시대도 종언을 고했다.<sup>28)</sup>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적국이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적대국이었으나 미국의 구소련 견제를 위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40여 년간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왔다. 따라서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질서 내에서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융합적인 관계를 형성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왔다.<sup>29)</sup> 그러나 점차 고조되어 온 양국의 갈등은 2018년 3월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권, 기술, 이념, 안보, 군사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 압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발전을 좌우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EU, 영국, 캐나다가 동시에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절대로 막

26) 최재덕(2020), “코로나 팬데믹, 중국 고립 시기 앞당겼다.” 『프레시안』 (9월1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410451965287#0DKU>(검색일: 2021.3.20.)>.

27) 홍완석(2021), “신냉전 2.0으로의 질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러 관계.” 『슬라브학보』 36(1), p211.

28) 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The End of Chimerica,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10-037 (2009), 27. 미국과 중국의 고도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Niall Ferguson과 Moritz Schularick은 2009년 20년간 지속되어 온 미중의 경제협력시대가 종식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29) Joseph. S. Nye,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33(4) (2010), 32.

을 수 없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의 목표를 세우고 일대일로, 강군전략,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외교<sup>30)</sup>와 경제 협력을 통해 친중 국가를 규합하고<sup>31)</sup>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에 공세적 외교로 대응하며 미중패권경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서 추구했던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대결은 강대국 간 힘의 대결이며 그 기저에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깔려있다. 냉전 시기에도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고, 지금과 같은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도 인도와 같이 중립을 지키며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전 세계가 정확히 양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립도 정확히 양쪽 극단에서의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많은 국가는 신냉전기에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선상에서 국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한 편으로 치우치긴 하되 양극단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한쪽 편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좌표 설정도 이념, 경제, 안보적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가변적이다. 따라서, 양진영의 경계가 명확했던 냉전시기와 달리 신냉전기는 그 경계가 흐릿하며 국익에 따라 좌표의 설정과 변경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태이지만 냉전시기처럼 한 편에 가담한다고 해서 강대국에 안보적 책임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기에 외교적 좌표 설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신냉전기에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중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편을 동조하여 다른 한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스스로 강해지기(自強)를 선택하고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섬세하고 명민한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5)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명확성과 대만해협 긴장 고조

대만은 미국이 중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사수해야 할 지정학적 교두보이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경쟁의 최전방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1982년 ‘대만관계법’에 관한 갈등을 해소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대립의 전면에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을 내세우며 대(對)대만 정책이 포괄적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8일 방영된 CBS ‘60분(60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을 투입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답해 대만 문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에 최소한의 방어적 무기만 판매하던 미국은 트럼프 전 정부 들어 2019년 4월 100억 달러(약 12조 4천 4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동년 5월에 미국 하원이 대만의 나토 참여와 무기 및 군수물자 등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2019 대만보증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6월 첫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Р)’에서는 대

30)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을 견지하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중 보건 사업에도 책임을 다해왔음을 강조하고 보건실크로드를 주장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유럽 및 남미에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산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와 효과성에 대한 불신은 중국의 백신 외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1) 2021년 3월 28일 향후 25년간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는 대신 4천억 달러(약 452조 원)를 이란에 투자하는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이란-러시아가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12월 3개국은 오만해상에서 첫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했고 2020년 9월 러시아가 주관하는 ‘Kavkaz-2020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과 이란이 참여했다.

만을 미국의 우방으로 표기하고 대만의 자기방어 능력을 위해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sup>32)</sup>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8월 7억 5000만 달러(약 9천억 원), 2022년 2월 1억 달러(약 1천 2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2022년 9월에는 '대만 관계법'을 보완하는 취지의 '안보 지원 대만법(Taiwan Policy Act, S.4428)'<sup>33)</sup>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연이어 대만을 방문해 정치·경제·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대만을 방문해 '대만은 이미 독립국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선언했다. 6월 27일에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공급망·수출통제 분야의 경제협력체인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도 출범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12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신장, 티벳, 홍콩 등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sup>34)</sup>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해협 긴장을 한 단계 심화시켰다. 강대국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에 대한 개념화와 공식화 등을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결정해 온<sup>35)</sup> 중국 정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대만 영해를 침범해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보다 더 대만 근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침해에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경고를 보냈고, 중국은 대만을 통제할 수 있고 무력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협력에 반발해 군용기의 빈번한 중간선 침범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순찰을 통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 무력시위의 상시화,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년 만에 '무력사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만백서'를 발행하고 대만에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다.<sup>36)</sup>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181개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고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면서 완전한 통일만이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중국 내정 간섭이나 통일 대업을 막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역사의 수레바퀴에 부셔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sup>37)</sup>

중국에 대만 통일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직후부터 근현대화와 해군 양성에 주력해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인민해방군 해군은 미 해군보다 60척 많은

32)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33) 안보 지원 대만법(Taiwan Policy Act, S.4428)은 대만을 비(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5조 8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4)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2.10.12.)

35)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 43-44쪽.

36) 정재흥, 이동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세종정책브리프』, 2022-06, 4쪽.

37) 배인선, "[펠로시 대만 방문 후폭풍] 중국의 '종합세트'식 반격...군사·경제보복 '전방위'."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3111112942> (검색일: 2022.8.10.)

3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4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0년간 세계화에 편승한 해운사들이 중국 CSSC(중국국영선박조선소)에 저가의 대형선박을 발주해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sup>38)</sup>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2년 9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실했고, 중국과 핵무기 경쟁도 의미가 없으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sup>39)</sup>

미중의 갈등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고, 대만은 미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과 자체 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2022년 9월 21일 열린 국방 및 군 개혁 행사에 참석하여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할 이익이듯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대만 해협의 긴장은 완화와 고조를 반복하면서 차츰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 IV. 중국이 추구하는 강대국 정체성

### 1. 중국의 강대국화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며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강대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강대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이 글로벌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줄 것과 함께 서구와 다른 중국 특색의 가치와 제도(중국특색 사회주의 노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향은 최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로 나타나고 있다.<sup>40)</sup> 시진핑 체제는 중공 19차 당대회보고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이라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하고, 이후 ‘중국몽’, ‘중국제조 2025’, ‘두 개의 백 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등의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보고에서 기존의 목표였던 2049년까지였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달성 시기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전략 전반에 강대국화와 연관된 일련의 변화들이 촉발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1월 29일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언급했고, 이는 중공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 제시로 이어졌다. 중국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 ‘중국이 처한 시대의 성격과 과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노선과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sup>41)</sup>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지위

38) 유용원, “붕어빵 찢어내듯 함정 15척을 동시에...중국 초고속 건조 비결,”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12/2022091200231.htm](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12/2022091200231.htm)(검색일: 2022.9.11.)

39) Michael E. O'Hanlon, Melanie W. Sisson, and Caitlin Talmadge, “Managing the risks of US-China war: Implementing a strategy of integrated deterrence,” <https://www.brookings.edu> (검색일: 2022.9.10.)

40) 이남주, 문익준, 안치영 외 2명,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KIEP 연구보고서 2020-03,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20), 3-6.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더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더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장화 개혁과 사회의 자율성 증가로 인한 사회주의의 원칙과 방향 약화, 중공의 통치 정당성 약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대한 공산당의 우려가 강대국화에 대한 지향을 강화하고 있다.<sup>42)</sup>

## 2. 중국의 애국주의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을 역으로 사회주의·애국주의·중화민족주의 강화를 통해 내부 결집을 도모하면서 빈곤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선전(深.)을 방문해 제2의 남순강화를 강조하는 등 코로나 19로 위축된 내부 경기 활성화와 당-국가체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sup>43)</sup> 또한, 중국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정립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여 지난 100여 년 동안 잃었던 지역 패권국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sup>44)</sup>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애국주의가 중화민족주의·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결합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중국 중심의 옛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회복이며 필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인민들에게 중화민족의 위대함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현재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인민의 단합을 통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애국주의 강화는 당에 대한 국내적 불만을 무마하고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당의 영도<sup>45)</sup>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 3. 중국식 현대화

시진핑 주석은 집권 1기에 중국몽(中國夢)을, 집권 2기에 신시대(新時代)를 핵심 키워드로 삼은 데 이어 집권 3기를 맞이하면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며 전면에 내세웠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현대화를 집권 3기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운 데에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빈부 격차, 제로 코로나 정책, 경제성장을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미중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통한 자립형 공급망 및 경제 블록화로 인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온 것과 같이 미중 경쟁 시기에 중국이 새로운 국가 비전을

41) 이남주, 문익준, 안치영 외 2명,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27-33.

42) 이남주, 문익준, 안치영 외 2명,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36.

43) 정재홍, ..2020 미국의 선택 : 미중 관계.., 세종논평 제28호 (경기: 세종연구소, 2020), 2.

44)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 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113.

45) 이정남,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중소연구.. 제44권 3호 (2020) 38-39. 시진핑 정권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관철되지 못한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이다. 위로부터 밑으로 수직적인 감독만이 가능하고 밑으로부터 위로 권력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산당은 모든 권력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는 영도적 지위를 지닌다.

제시하여 실리와 평화의 견지에서 전 세계 국가와 대등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중국의 발전 경로로 주장하면서 공산당의 당위성과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인민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맞서 단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 전략과 이념적 대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VI.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의 썬범이 더욱 복잡해졌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 동쪽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긴밀해지고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 구도가 남아있는 한반도에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대결 구도의 최전방에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강대국들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어 최악의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중·러와 북·러 양자 관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책임강국’을 내세우는 중국이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중러 연대의 선봉에 서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으로써 권위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는 더 많은 서방 제재에 직면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하방을 받쳐주는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보완적 교환 관계가 성립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군사기술과 석유를 제공했으며 자국민의 북한 관광도 허용했다. 북한은 현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여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군사기술을 고도화시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찰위성 발사에도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에 안보적 위협을 조성하여 북한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두둔하면서, 유엔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억제력을 무력화했다.

평양과 모스크바가 한층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북러의 교역량은 북한의 대외 교역량의 약 2%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을 대체하지 못한다. 따라서 2024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중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과 중국은 해외노동자 재파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 완화, 외국인 관광 등도 진척되기 어려웠다. 해외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가장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지만 UN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코로나 19 국경봉쇄를 이유로 중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 귀환할 경우 재파견이 어려운 상황이다. ‘책임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기 어렵고 북한을 이유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조장

하고자 하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우회하여 재파견할 방안을 마련하는가가 북중 관계 정상화의 주요 이슈로 보인다.

중러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가 결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 러시아는 전시 상황인 만큼 이란, 북한과 밀착하여 군사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경쟁에서 세(勢)를 불리고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브릭스 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과 연대하여 북중러의 선봉에 서고자 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북러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의 도전에 미국과 공동 전선을 펴기 시작했고, 나토의 전략 범위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고 미중 갈등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2021년 발족한 오커스(AUKUS)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상시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할 중국판 '슈퍼 301조'인 새 관세법을 마련했다. 2024년 12월부터 가동되는 새 관세법에서 주목할 것은 제17조로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를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제2의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은 전방위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 경로를 방해한다고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강대국화를 추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중 경쟁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다.

진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 냉전적 안보 구도를 강화하고 북한은 도발 상시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되었다. 이는 현재 강력한 북중러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북·중·러가 핵과 ICBM을 보유한 이웃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한미일 협력에만 편향된다면 북중러와 관계가 악화하여 오히려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대만해협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북중러가 신속히 군사적으로 연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에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하며 어렵더라도 미·중·일·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중러와 비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북한을 견제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금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에 맞는 기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한국 외교의 외연 확장 못지않게 남북·한중·한러 등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양자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은 중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한러 관계는 위기관리로 양국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다가올 평화의 시기에 더 발전적 관계를 형성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이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이다.

## ◆ 지정학적 위기와 한국의 경영 ◆

### 1).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경쟁력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쟁임. 미국·대만·중국·일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 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잡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도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IPEF와 CHIP4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함.
  - 한국 정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 정부가 2042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 전국 15개 지역을 국가 산단으로 조성.
    - 삼성전자 20년간 용인에 300조 원 규모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 조성 계획, 지역균형 발전 위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거점에 10년간 60조 원 투자 발표, (반도체 패키징, 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
- 반도체 산업 경쟁력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 상승
  -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대만의 생명줄임.
  - 대만 정부는 정부 주도로 1974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세워 1987년 TSMC가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북부, 서부, 남부에 첨단과학 기지 13곳을 반도체 벨트로 건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함.
    - 최근 대만 정부는 ‘산업혁신법 개정안’ 의결-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R&D) 투자액의 25%, 설비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액
  - 대만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지정학적 가치를 높임.

## 2). 지정학적 위기와 한국의 경영

-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함.
  - 한국은 5년 만에 한미안보훈련을 재개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
  -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로써 국격에 맞는 기여를 통해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증진, 보편적 가치 중시,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통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들이 함께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국은 중국을 중요한 협력 국가(key partner)로 언급했지만, 한중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구체적인 전략 대부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와 매우 유사함.
      -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안정 및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미국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 역내 다자간 연합훈련 참여 및 QUAD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왔던 역내 전통안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음.
  - IPEF와 칩4 동맹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음.
- 한국은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함.
  - 미·중·일·러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임.
    - 강대국의 힘이 대립하는 중간국이라는 점, 구조적 안보 제약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전략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 등
    -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완충지이자 미·중·일·러의 균형점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지역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
    - 미러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 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유럽의 안보협력체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됨.
    - 지정학적 위험이 큰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하게 균형

점을 이동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더라도 중간국은 핵심이익을 침해당한 강대국으로부터 더 큰 안보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
- 북한 견제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한중일 협력, 중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3). 지정학적 위기와 한국의 경영

□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함.

-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 해협에서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임.
  -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임.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중간국의 외교적 실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완충지 확보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통치를 결정. 소련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을 도왔으며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함.

※1950년 10월 1일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북한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응하면서 북중의 혈맹관계가 형성됨.

※1953년 북한, 중국, 유엔군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중임.

□ 한국은 어려운 안보적 상황에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함.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임.

## 참고문헌

- Address by the President Vladimir Putin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en.kremlin.ru> (검색일: 2022.3.18.)
-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 (검색일: 2022.9.15.)
-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5.1.)
-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 H. Mackinder, *Democratic Ideas and Reality*, New York: Norton, 1919.
- Humeyra Pamuk, Dmitry Antonov, “U.S.responeds to Russia security demands as Ukraine tensions mount.”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ays-destructive-sanctions-wouldnt-hurt-putin-perso> (검색일: 2022.2.2.)
-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 (검색일: 2022.8.5.)
- Jack Stone Truitt, “U.S. warns od China threat in first Pacific islands strategy.”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 (검색일: 2022.10.1.)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2001.
-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7.15.)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 문정인, “[문정인 칼럼]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불안한 세계질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812.html> (검색일: 2022.8.8.)
-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29권 1호 (2020), 46쪽.
- 장세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대유라시아 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6.24.)
-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118-119쪽.
- 홍완석, 「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시사점」, 『외교』, 제141호 (2022), 119-120쪽.